

세대균열의 현실, 세대담론의 재현* - 세대불평등 담론의 유래에 관한 질적 담론사 연구 -

신진욱**·조은혜***

세대갈등과 세대불평등의 담론이 언론과 출판 매체에서 범람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논문은 사회구조, 정치성향, 의식과 정체성의 차원에서 한국사회 세대균열의 복합적 현실을 규명한 선행연구들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1990년대 후반부터 2019년까지 진보와 보수 성향의 주요 언론에서 생산되어온 세대담론의 역사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오늘날 대중적으로 회자되는 '386세대'와 '청년세대'를 대립시키는 대중담론의 탄생과 변형을 추적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 균열구조의 측면에서, 2천년대 한국사회 세대균열은 고용, 소득, 복지, 정치성향, 의식 등 모든 면에서 단일한 거대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차원에서 각기 다른 세대적 특성과 세대 간 관계를 보이는 복합구조를 이루고 있다. 둘째, 담론의 의미구조의 측면에서, 한국의 보수언론이 확산시킨 '386' 세대론이나 '청년' 세대론은 한국사회의 제반 문제의 세대적 성격을 극단적으로 과장해왔을 뿐 아니라, 한국의 세대관계를 일차원적인 지배/종속, 수혜/피해, 수탈/박탈 관계로 왜곡해왔다. 셋째, 담론사의 측면에서,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청년 386' 엘리트에 관한 세대담론이 탄생한 이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진보 386' 혐오 담론의 주요 프레임들이 모두 만들어졌고 나중에는 1960년대 출생 연령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386 세대' 혐오 담론으로 확대되었다. 이 논문은 2천년대 한국에서 각 세대의 생애과정의 차이가 더욱 중요해졌지만, 그와 동시에 대중적 언론과 출판 매체의 선정적 세대담론에 대한 비판적 거리의 필요성 역시 함께 커졌음을 강조한다.

주제어: 세대균열, 세대담론, 세대불평등, 담론사, 담론분석

* 이 논문은 2018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논문의 개선에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socioshin@cau.ac.kr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byoeleye@gmail.com

1. 서론

세대 간의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차이와 갈등이 만들어내는 세대균열(generational cleavages)이 사회구조와 선거정치, 일상문화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이런저런 세대를 다양한 방식으로 명명하고, 각 세대의 특성과 세대 간 관계를 정의내리며, 각 세대 구성원의 체험과 열망을 이야기하는 세대담론(generational discourses)이 언론과 출판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대중화되고 있다. 것처럼 ‘세대’에 대한 관심과 담론이 범람하는 가운데, 한편으로 한국사회와 정치에 실재하는 세대균열의 양상과, 다른 한편으로 세대 현실을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하는 담론들이 서로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 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보다 성찰적인 세대 인식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대(generation)’는 단순히 ‘20대’, ‘청년’, ‘3040’, ‘4050’, ‘노인층’ 등과 같이 어떤 시점에 일정한 나이에 있는 인구집단을 뜻하는 개념이 아니다. ‘연령’과 ‘세대’는 다른 개념이다. 연령효과(age effect) 또는 생애주기 효과(life cycle effect)는 어느 시점에서든 사람들이 특정 연령대에 이르면서 특정한 성향을 보이는 현상을 뜻한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누구나 보수화된다는’ 가설이 입증되면 연령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달리 세대효과(generation effect) 혹은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는 출생시기가 같은 인구집단이 비슷한 역사·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사회구조 내에 유사한 위치에 놓이게 되거나, 유사한 생애과정을 거쳐 거나, 서로 간에 동류의식을 갖게 되거나, 나아가 생애 전반에 걸쳐 유사한 의식과 태도를 갖는 등의 특성을 보이는 것을 뜻한다.

그런 의미의 ‘세대 현상’은 일반적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모든 출생

코호트에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대중적 세대담론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사회 전체가 특정 세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거나, 어떤 세대가 다른 세대를 착취하고 있다는 류의 일차원적 사고는 현실의 문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늘날 한국에서 구조, 의식, 행위의 각 측면에서 세대적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 과연 어디에 얼마만큼 존재하는가, 각 출생코호트가 어떤 사회구조적 조건에 놓여 있는가, 어떤 이념적 또는 정치적 성향을 보여 왔는가 등의 질문을 고루 펼쳐놓고 전체 그림의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개념화하는 인내심이다.

또한 세대 간 관계의 측면에서도, 한국사회의 세대균열이 소득, 고용, 자산, 사회보장, 노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단일한 갈등구조 혹은 불평등구조를 보이는지, 아니면 각 측면에서 각기 다르게 배열되는 변칙적 균열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세대, 계급, 젠더 등 다차원의 균열들이 일대일 관계를 맺고 있어서 예를 들어 ‘1960년대생’과 같은 특정 출생세대가 경제적으로도 젠더상으로도 지배적 위치라는 식의 획일적 상이 과연 타당한지, 아니면 다수의 균열선이 어긋나게 교차하는 다중균열(cross-cutting cleavages)의 상이 보다 현실에 가까운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게 주장을 개념화해야 한다.

이상의 질문들에 대한 밀도 있는 대답은 다각도에서 수행되는 많은 연구의 축적과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해석을 서둘러 제시하고 싶어 하는 많은 세대담론은 사회현실에 대한 왜곡된 상을 확산시키거나 부분적 진실을 전체의 모습으로 비약시킴으로써 정확한 문제 진단과 해결을 오히려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더구나 대중들의 즉각적인 호응과 반응을 촉발시키는 자극적인 세대담론은 종종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비롯한 사익을 위해 조작되고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세대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학문적 의의뿐 아니라 실천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이 논문은 우선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세대 현실이 사회구조, 정치성향, 의식의 측면에서 각기 다른 양상을 띠는 복합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 다음, 그러한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언론매체의 세대담론이 어떤 탄생과 변형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마치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처럼 믿어질 정도의 대중성을 획득하게 되었는지를 담론사적으로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에서 1990년대 이래 지난 30년 동안 (가) 사회구조적 차원: 고용·소득·자산·복지·노후 등 여러 면에서 세대균열의 분할 구조, (나) 정치와 의식의 차원: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 및 투표 선택, 사회의식의 측면에서의 세대균열, (다) 담론적 차원: 각 세대의 특성과 세대관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하는 언론매체의 세대담론을 대상으로 하여, 객관적 세대현실과 미디어 세대담론 간의 불일치 관계의 형성을 추적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2천년대 들어 언론매체와 출판시장, 정치담론에서 폭발적으로 생산·소비되어온 ‘386 세대’ 담론과 ‘청년 세대’ 담론을 계보학적 담론사 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현실 대 담론’, ‘객관적 사실 대 재현된 현실’을 이분법적으로 단순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학문적 연구결과들도 사회적으로 구성된 언어와 담론의 질서 안에서 수행되는 것이며, 대중적 담론 역시 학문적 탐구를 통해 얻어진 지식과 정보에 어느 정도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문적 탐구의 절대적 객관성을 주장하지 않고도, 우리는 한편으로 학문공동체 내에서 얻은 연구결과들과, 다른 한편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유포되는 재현적 구성물 간의 일치와 불일치를 탐구하고 그것의 학문적, 실천적 의미를 토론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담론 비교의 방법론적 전략은 담론연구의 역사에서 오래 전부터 널리 채택되어왔다. 예를 들어 특정 직업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당 직업군에 관한 미디어 재현물에서 과소대표되는 현상, 성소수자 혐오 집단이 생산하는 담론이 성소수자의 실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현상, 특정 인종집단의 범죄율이 범죄에 관한 정치담론에서 과장되는 현상 등은 그동안 표준적 내용분석에서부터 비판적 담론분석에 이르는 다양한 연구 전통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아왔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연구가 세대균열과 세대담론을 비교하고 현실왜곡 담론의 유래를 추적하는 것을 통해 의도하는 궁극적 목표는, 세대현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세대담론의 내용과 그 정치적 함의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한국사회 세대현상의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해결할 더 나은 접근법을 만들어가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2. ‘현상’으로서의 세대담론

1) 세대균열에 대한 선행연구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서구, 특히 유럽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치사회적 균열은 자본-노동 간의 계급균열이었으며, 그에 따라 정당·대의정치 영역에서 양대 계급의 이해관계와 세계관을 대변하는 좌·우파 정당 간의 경쟁체제로 이뤄진 계급정치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유럽의 계급정치를 모델로 하여 한국에서 계급정치가 부재한 현실을 강조하는 담론이 많았다. 하지만 서구에서도 계급균열의 이론이 체계화된 196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이미 계급정치와 계급균열의 종언 또는 약화를 주장하는 여러 중요한 이론이 제기되었다. 탈산업사회론, 중위투표자론, 포괄정당론 등이 대표적이다(Bell 1970; Downs 1957; Kirchheimer 1966). 현대사회의 진영을 가르는 균열의 성격은 언제나 다차원적이었고 논쟁적이었던 것이다.

전통적 균열구조의 해체와 새로운 균열의 등장에 관한 학문적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1970년대 이후 다양한 이슈에 관한 사회적 저항들이 조직

화, 제도화되고 녹색당과 같은 새로운 정치세력이 성장하면서 정당정치의 판도가 중대한 변화를 겪기 시작하면서부터다. 크게 네 가지 입장을 구분해볼 수 있다.

가장 대립하는 두 견해는 계급균열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과 일체의 구조적 균열 자체가 해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첫 번째는 정당체계와 유권자 배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계급정치 균열이 여전히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권자들의 계급적 위치와 투표 선택 간의 관계, 투표 성향의 지속성과 유동성, 정당체계와 정책노선의 분포 등 여러 면에서 여전히 좌우의 계급균열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Bartolini and Mair 1990; Hout, Brooks, and Manza 2001; Stonecash 2006).

둘째 입장은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견고한 사회구조적 기반을 가진 지속적 정치균열이라는 것 자체가 해체되고 있으며, 정당체계가 제도화되지 못한 나라들뿐 아니라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들에서도 정당들은 이제 점점 더 단기적인 이슈와 유동적인 유권자 선호에 반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다(Franklin, Mackie, and Valen 1992; Franklin 2004).

위의 두 입장과 구분되는 세 번째 주장은 기존의 계급균열이 지속되거나 거시구조적 균열 자체가 해체된 것이 아니라, 전통적 계급균열이 약화된 자리에 세대·가치 균열과 같은 새로운 지배적 균열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잉글하트의 ‘탈물질주의’ 이론, 돌턴의 ‘시민정치’ 이론 등이 대표적이며, 그밖에도 정당일체감의 약화와 가치투표의 영향력 증대를 주목한 여러 연구가 있다(Dalton 2008; Inglehart 1990; Knutsen 2007; Kriesi 1997).

끝으로, 세대와 가치 등에 따른 새로운 균열이 계급적 이슈의 좌우 대립 구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슈와 결합되어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좌우 대립 구도로 확대되었다는 주장이 있다(Decker 2011). 이에 따르면 세대와 가치지향의 차이에 따른 정치성향의 차이가 새로운 축으로

등장했지만, 예를 들어 청년층이 젠더·환경·평화 등 새 이슈에서 보다 진보적일뿐 아니라 분배 이슈에서도 전통적인 좌파 성향 정책에 보다 우호적이어서 세대·가치·계급을 잇는 진영이 형성된다.

이처럼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균열구조가 오늘날 얼마만큼 지속되고 있으며 세대균열과 같은 새로운 균열 축이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학문적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학계에서는 서구와 다른 근대화 경로를 거쳐 온 역사적 배경 위에서 오늘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치사회적 균열의 특수성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강원택 2011; 마인섭 2003; 신진욱 2011; 이현우 2008).

특히 선거와 유권자 연구, 주관적 이념성향과 정책 태도 등의 분야에서 균열구조의 특성과 변화에 관한 관심이 지속됐다. 이 연구들은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크게 지역, 세대, 계급 균열이 유권자 투표 선택과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치와 문화에서 계급균열은 전통적으로 미약했던 역사적 배경 위에서 민주화 이후 1990년대까지는 출신지역에 따른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뚜렷했다(김만흠 1995; 조성대 2008; 최준영·조진만 2005). 그래서 비계급적 또는 계급배반적 의식과 정치성향이 나타났으나, 2천 년대에 와서는 노년층을 제외한다면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계급투표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김영순·여유진 2011; 문우진 2011; 장승진 2013; 전병유·신진욱 2014).

세대 변수 및 그에 연동된 가치 변수는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2002년 대선을 기점으로 하여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과 선거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강원택 2003; 김욱 2007; 박명호 2009; 2012; 박원호 2012; 2013; 어수영 2007; 윤상철 2009; 이갑윤·이현우, 2014). 이 변화의 역사적인 의미는, 1987년 민주화 이전 한국 선거의 중요 변수였던 도농(都農) 균열, 민주화 이후 1990년대 선거를 좌우했던 지역 균열에 이어 이제 세대, 이념, 가치 등이 21세기 한국 정치의 중요한 균열의 축으로

부상했다는 데 있었다.

사회학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세대 개념과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주목할 만한 시도들이 이뤄졌고(박재홍 2001; 2003; 전상진 2004), 각 세대의 특성, 세대 갈등, 세대와 계급의 관계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박재홍 2010; 신광영 2009; 최셋별 2018). 최근에는 정치엘리트, 기업, 노동시장,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사회 전 영역에서 세대 간 불평등 또는 나아가 지배관계가 한국사회 균열구조의 중심축을 이룬다는 주장이 제시되기도 했다(이철승, 2019). 이러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뒤에서 보다 상세히 다룰 것이다.

2) 대중적 세대담론: ‘386’과 ‘청년’

이처럼 학계에서 세대 현상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축적되어온 가운데, 언론과 출판물, 정치권 등 다른 사회부문에서는 2천 년대 들어 세대갈등, 세대불평등, 심지어 세대착취 등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담론이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그중 가장 많이 생산·소비된 담론이 ‘386 세대’와 ‘청년세대’의 담론이다. 두 용어 모두 모호하고 유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386’은 문자 그대로는 이 용어가 생겨난 1990년대 후반에 30대이었고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인 인구집단을 뜻하지만, 가장 빈번하게는 80년대 대학내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정치엘리트 집단을 지칭했고, 다른 맥락에서는 1960년대 출생코호트 전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민주화운동’ 세대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하며, ‘진보적’ 정치엘리트와 시민사회 세력을 뜻할 때도 있다. ‘386’은 이처럼 다의적인 장에서 유동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386’ 담론은 1990년대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선거, 당권투쟁, 부패스캔들 등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을 계기로 폭발적

으로 생산되었고, 그 상징적 중심과 연결망 역시 역동적으로 변해왔다(신진욱 2020).

‘386 세대’라고 불리는 1960년대 출생 집단은 그 인구학적 특성 때문에 한국에서 하나의 ‘정치세대’가 실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대상이기도 했다. 그보다 연령이 높은 세대는 청년기를 권위주의 체제에서 보냈기 때문에 중·노년기와 비교 가능한 청년기 정치성향의 정보가 없고, 그보다 연령이 낮은 세대는 아직 중·노년기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들의 성향이 지속되는 세대적 특성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배진석 2017: 215). 그래서 ‘386’이 과연 얼마만큼 정치세대로서 일관성을 보여 왔는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들의 정치성향은 어땠는지, 다른 출생 코호트들과 어떤 유사성과 차이가 있는지가 흥미로운 경험적 탐구의 대상이었고 여전히 학문적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다.

‘청년’도 마찬가지로 모든 시기에 신기한 블랙박스처럼 학계, 언론, 정치권과 출판시장의 호기심을 끈 관심대상이었다. ‘청년’은 ‘86세대’와 달리 출생코호트가 아니라 연령 개념이어서, 어느 시점의 청년이냐에 따라서 출생 코호트가 달라진다는 점을 예민하게 관찰해야 한다. 지금의 50대, 40대, 30대가 모두 한때 ‘떠오르는 386’, ‘X세대’, ‘신세대’, ‘IMF세대’, ‘N세대’, ‘월드컵세대’, ‘촛불세대’, ‘88만원 세대’였지만 지금은 ‘90년대생’의 윗세대다. 이들 다양한 코호트가 ‘청년’이었던 각기 다른 시점에 이들은 때로는 기성세대가 이해할 수도 제어할 수도 없는 신인류로, 때로는 가장은 없고 불쌍한 하층민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언론, 정치권, 출판계에 퍼진 청년에 관한 그림들은 대부분 청년들이 그린 것이 아니다(김선기 2016; 2018; 정성조 2019). ‘청년’은 그 세대적 특성이 아직 불확실한 데다 그들 자신의 권력자원이 약하기 때문에, 종종 기성세대 엘리트집단이 세대 프레임을 동원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세대계입’(전상진 2018)의 표적이 된다. 그러므로 특정 시기에 ‘청년’이

실제 어떤 정치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세대관계 속에 있는지를 신중히 고찰해야 한다.

이처럼 두 용어 모두 마치 달리는 두 마리 말처럼 그 의미가 유동적이어서 양자의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1990년대 ‘386 세대’는 떠오르는 청년이었지만 2010년에 와서는 중년층이 되었고, 2000년대에 청년은 1970~80년대생이었지만 2010년대에 그들은 ‘90년대생’보다 연장자인 30~40대가 되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두 용어의 화용론적 의미,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상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끌어오기 위한 담론적 실천과 투쟁의 공간이 그만큼 역동적이다.

2천년대 언론·출판계의 세대담론은 양면적 모습을 보인다. 한편으로 청년들의 구조적 불안정성과 미래의 불안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고, 그런 변화는 청년층의 고용과 복지, 노동기본권 등 중요한 주제들을 정치적 의제로 올려놓았다(우석훈·박권일 2007; 정보영 2018).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한국사회 세대현실에 대해 이념화되거나 과잉단순화 된 담론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한 담론들은 특정 연령대가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기득권을 독차지하고 청년들을 착취하고 있다거나, 그런 세대불평등의 중심에 ‘진보386’의 정치권, 지식인, 노조, 사회운동세력이 지배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식의 서사구조를 보인다(김광동·김세중·김영호·박효중·윤창현·이규식 2010; 김대호 외 2019; 김정훈·심나리·김항기 2019; 백경훈 외 2019; 이동관·김대호·윤창현 외 2019).

2019년에 출간된 이철승의 『불평등의 세대』는 저자 자신이 이해한 바대로 “학술서와 대중서의 중간쯤에 놓일 책”(이철승, 2019: 8)으로서, 풍부한 학술적 연구결과와 더불어 대중담론에 특징적인 수사적 기교가 함께 담긴 주목할 만한 저작이다. 저자는 “386 세대가 권력을 잡고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찌면 더욱 심화된 ‘불평등 구조’를 가진 사회가 되었다는 … 모순을 해명하기 위해 ‘세대론,’ 즉 ‘세대의

정치를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이철승 2019: 16, 17), 그에 대해 이 저작에는 세 가지의 각기 다른 차원의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1) 1960년대생 ‘엘리트 네트워크’의 정치경제적 권력화라는 주장, (2) ‘1960년대생’ 연령 코호트 우위의 세대불평등 사회구조라는 주장, (3) ‘진보적’ 386 정치인, 노조, 지식인들의 지배체제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첫째, 1960년대생 코호트 내 엘리트 집단의 권력화 주장이다. “각 세대 별로 다른 수준의 응집성을 갖는 ‘세대 엘리트 집단’이 출현”하는데, ‘386 세대’의 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기초로 해서 정치사회적 위계 구조의 상층을 ‘과잉 점유’하고, 그러한 ‘세대의 정치’를 통해서 권력과 영향을 증대해왔다는 주장이다(이철승 2019: 17, 20). 이런 의미의 ‘386 세대’는 60년대 출생코호트의 다수 구성원과 구분되는 ‘엘리트’의 위치에 있는 집단을 가리킨다.

둘째 주장은 1960년대 출생 코호트가 하나의 ‘세대’로서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에서 놓인 위치에 관련된다. 이철승은 ‘민주화(또는 386) 세대’(1960년대생)가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거대한 전 지구적인 구조 변동의 물결에 무사히 ‘올라탄’ 반면, 다른 세대들은 그로부터 (상대적으로) 밀려 나거나 올라타는 데 실패하거나, 아니면 먼저 올라탄 자들에게 ‘복속’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불평등 구조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한다(이철승 2019: 21, 24).

셋째, 1960년대생 코호트 내 진보적 세력의 지배권력화 주장이다. 이 세력은 “(‘혁명적’) 평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를 그 이념으로 채택했으며, 대학과 노동 현장을 중심으로 지식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현실에 뿌리내린 집단, 그리고 “비대졸자 386의 경우, 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에 대졸자 386과 연대하여 노동조합 및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그룹”이다. 그들은 “이념·조직·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민사회를 형성한 후, 국가에 대한 점유 작전에 집합적으로 돌입”하여 “시민사회와 국가를

‘점유’해가는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의 지배권력이 되었다는 것이다(이철승 2019: 22, 33, 35).

위의 세 주장 중에서 설득력 있게 논증된 부분은 첫째, 즉 1960년대생 중에 특정한 ‘응집적 엘리트 네트워크’가 정치권, 기업, 노동시장 등에서 구축한 과두제적 권력의 문제다. 이 저작은 정치권과 기업, 상층노동시장의 연령구성 등의 측면에서 60년대생이 과대대표되고 있고 권력상층부의 그러한 구조가 일정한 거시적인 불평등 효과를 낳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했으며, 이를 통해 ‘386 엘리트집단’의 장기집권 구조와 기제에 대해 비판과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다.

하지만 둘째 주장, 즉 ‘1960년대 출생 코호트’가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주장은 특정 부분에선 옳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의심스럽다. 자산 보유와 대기업 종사자 등 몇몇 측면에서 1960년대생 인구집단이 더 나은 위치에 있지만, 고용·소득·사회보장의 다른 여러 면에선 그와 전혀 다른 세대관계가 발견된다. “오늘의 중·장년 세대들은 … 아버 세대가 제공한 ‘풍성한 일자리’와 ‘일자리를 통한 복지’ 모델의 수혜를 받은 세대”(이철승, 2019: 347-8)라는 결론은 훨씬 더 신중하고 조건적인 명제로 재정식화 되어야 한다.

나아가 셋째 주장, 즉 ‘진보386’의 정치인, 지식인, 노조, 시민단체가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를 ‘점유’했고 그것이 한국사회 불평등과 경제부진 등 제반 문제의 주원인이 되었다는 거대서사는 위태롭기까지 하다. 진보 386 세력 역시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그들이 나라를 점유하여 지배권력을 독점한다는 식의 극우주의적 ‘점령(occupation)’의 담론은 전혀 다른 얘기다. 이런 여러 논리적 약점에 대한 비판을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아마도 이 저작의 여기저기 보이는 세대, 계급, 권력의 ‘맞물림’, 즉 교차와 착종의 교집합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일 것인데 그렇게 되면 세대론적 날카로움은 사실상 소멸된다.

이처럼 세대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대중적 담론 간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다. 2천 년대의 많은 연구들이 한국의 사회구조, 정치성향, 의식과 정체성 등 여러 측면에서 세대균열의 입체적 진실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선 사회현실의 부정의(不正義)의 원천을 명쾌히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듯한 외양을 띤 대중적 세대담론들이 번성했다. 이 연구는 그런 현실-재현의 간극을 추적하기 위해 세대균열의 다차원적 양상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핵심 발견들을 체계화한 다음에 그것을 대중매체의 세대담론과 비교함으로써 보다 신뢰할 만한 세대론적 지식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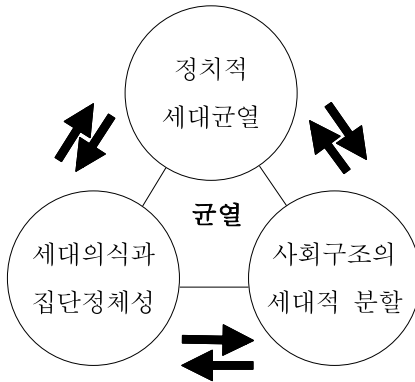
3. 이론과 방법론

1) 세대균열의 3차원 모형

‘세대’가 어떤 사회의 정치사회적인 중요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은, 출생 연령대에 따른 집단 내 특성과 집단 간 갈등이 그 사회 전체의 거시적 계층구조 또는 나아가 대립구조를 반영하거나 형성할 정도의 중요성을 띠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과학은 이처럼 거시적, 구조적, 장기적이며 견고히 집단화된 갈등구조를 ‘균열(cleavage)’이라는 개념으로 이론화해왔다(Lipset and Rokkan 1967; Rokkan 1999).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회에서 지배적인 균열은 다른 많은 일시적, 국지적, 유동적 성격의 갈등들과 구분되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20세기의 대표적 균열은 계급, 종교, 인종, 민족, 도농(都農) 등 여러 차원에서 형성되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세대 차원의 균열형성이 부상했고 이는 가치, 젠더 등 다른 새로운 균열의 차원들과도 종종 연결된다.

한 사회의 균열구조와 그 변화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균열을 구성하는 세 차원을 개념적으로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첫째는 사회구조적인 ‘분할(division)’이다. 이것은 직업, 소득, 자산, 종교, 학력, 인종, 젠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공동의 상황과 조건에 있는 개인들이 어떤 집합적(aggregate) 형태로 분포되어 있느냐에 관련된다. 둘째는 ‘집단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ies)’의 차원이다. 즉 우리와 그들, 내부와 외부, 나와 적을 구분하는 집합의식과 정체성이 어떤 방식으로 상징적으로 구성되는냐의 문제다. 셋째는 행위자들이 집단화, 조직화, 나아가 정치세력화(political articulation)되는 차원이다. 이때 개인들은 공동의 조건과 의식만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행동하는 집단행위자가 된다 (Bornshier 2009; Kitschelt 2004; Kriesi 1998; Mair 2001). <그림 1>은 사회구조적 분할, 그것의 집단화와 정치화, 그리고 행위자 의식과 정체성이라는 균열 이론의 세 측면(신진욱 2017, 94)에서 세대 연구의 분석틀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세대균열과 세대담론의 이론적 관계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상당한 정도로 충족되었을 때 ‘균열’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강한 입장도 존재하지만(Bartolini and Mair 1990), 현실에서는 사회구조적 분할, 의식과 집단정체성, 정치적 차원에서의 유권자 균열 가운데 어떤 측면에서 세대적 특성이 강한지는 다양할 수 있고 그 세 차원의 입체적 형태는 또한 변할 수 있다(Deegan-Krause 2007).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급하게 세대론의 설명력의 유무를 거칠게 판정내리는 대신에, 오늘날 사회과학적 균열 연구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는 위의 삼차원 이론 모형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어떤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 ‘세대균열’이 존재하는지를 차분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이미 한국에서도 세대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 논문의 4장에서 그 선행연구의 성과에 기대어 위의 이론 모형의 경험적 내용을 채워 넣어 볼 것이다.

2) 담론사 분석 방법론

이 논문의 5장에서 제시할 세대담론 연구는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연구 흐름과 함께 발전된 담론사 분석(Discourse Historical Analysis)의 이론과 방법론을 기초로 삼아서 담론의 ‘행위’, ‘사건’, ‘유형’이라는 세 분석적 차원을 입체적으로 조명할 것이다. 그것은 특정 시점에서 세대담론의 텍스트의 특성을 정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정치사회적 사건과 상황 속에서, 어떤 상징과 의미구조의 담론을 생산하고 확산시켰는지를 분석하며, 현재 시점에 지배적인 담론유형을 처음으로 탄생시킨 주체와 맥락이 무엇인지를 추적한다.

‘담론(discourse)’은 종종 문자화된 텍스트 또는 텍스트의 체계로서 이해되며, ‘담론 연구’는 텍스트 분석과 동일시되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다.

서구어에서 담론과 텍스트 개념의 어원은 두 연구 관심의 목표와 문제의 식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한글로 ‘담론’으로 번역되는 discourse, discours, Diskurs 등의 라틴어 어원은 discurrere(= to run back and forth)에 관련된다. 즉 담론은 상징적으로 매개된 사회적 상호작용,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의 언어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텍스트 개념의 어원은 textere(= to weave)에 관련된다. 그것은 일정한 수준의 응집성을 가진 상징들의 관계체계를 뜻한다. 말하자면 텍스트는 담론 자체가 아니라 담론 행위가 생산한 문자, 음성, 몸짓의 질서 있는 배열이다. 역으로, 담론은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를 남기는 행위와 상호작용의 과정을 뜻한다.

실제로 담론 연구라는 접근법 자체가 텍스트 분석의 전통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됐다. 전통적인 텍스트 언어학은 텍스트 특성의 기술(記述)과 분석에 제한되어 있었으며, 그 주요 관심사는 어휘·문법·텍스트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와 달리 담론 연구는 언어적 행위와 상호작용을 보다 넓은 사회적 과정의 일부로서, 사회적 구조에 의해 규정되면서 또한 그것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연구한다. 텍스트 분석은 담론 연구의 중요한 구성요소지만, 텍스트의 의미는 오직 담론 행위의 상황적, 제도적, 구조적 맥락 속에서만 해석될 수 있다(Van Dijk 1997a; 1997b). 따라서 담론 연구는 ① ‘담론’ 행위와 그 산물인 텍스트, ② 담론 행위가 일어나는 ‘제도적 장’, ③ 그 안에서 제도화된 소통 방식인 ‘장르’, ④ 담론 행위에서 다루지는 ‘토픽’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만 한다(<표 1>, 진하게 표시한 예는 이 논문의 연구대상).

〈표 1〉 담론 연구의 맥락적 기본 요소

개념	의미	분석 대상 예시
담론	사회적 행위의 한 형태로서 언어 사용	담론 행위와 상호작용, 그 산물인 문자, 음성, 몸짓, 이미지의 텍스트. 예를 들어 세대에 관한 일체의 언설.
제도	담론 행위의 장(field), 영역(domain)	의회, 선거, 정부, 법정, 언론, 기업, 공장, 병원, 학교, 가족, 인터넷 커뮤니티 등
장르	특정 목적을 위해 제도화된 소통 방식	언설, 설교, 강의, 신문기사, 사설·칼럼, 학교 수업, 인터뷰, 정책문서, 토크쇼, 인터넷, SNS, 사적 대화 등
토픽	담론의 이야기거리. 특히 사회적 주제들	선거, 경제, 실업, 빈곤, 불평등, 노동, 복지, 남북관계, 부패, 범죄, 성폭력 등

이처럼 행위, 제도, 구조의 차원을 담론 연구의 중심에 놓는다면 담론 연구가 단지 글로 쓰인 것, 말해진 것이라는 수동태의 결과물을 분석하는 데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애초에 담론 연구라는 접근법 자체가 탄생할 때 극복하고자 했던 텍스트 분석의 전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담론 연구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왜 말했으며, 그것이 보다 넓은 정치사회적 환경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며, 사회관계와 특히 권력관계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묻는다. 그러한 접근을 취하는 연구는 담론의 분석적 차원으로서 ① 텍스트를 생산하고 주고받는 담론 ‘행위,’ ② 그러한 상호작용의 맥락인 담론적 ‘사건,’ ③ 거기서 생산되는 담론의 ‘유형,’ ④ 일련의 담론 유형들을 접합하여 구성하는 보다 넓은 담론의 ‘질서’를 포함한다(<표 2>, 진하게 표시한 예는 이 논문의 연구대상).

〈표 2〉 담론 개념의 분석적 차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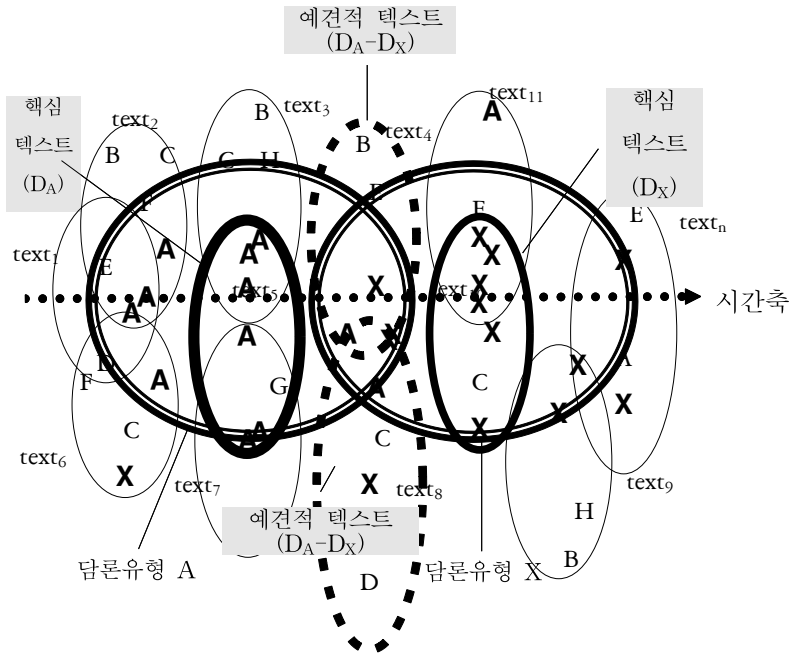
개념	의미	분석 대상 예시
담론 행위 (discourse practice)	음성, 이미지, 문자 텍스트를 생산, 유포, 수용하는 행위	일상대화, 의회에서의 논쟁, 대국민 홍보물, 기자회견, 언론 기사·사설·칼럼, 대중잡지 기고, 인터넷 포스팅,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게시, 동영상 제작 또는 공유 등
담론 사건 (discourse event)	담론적, 비(非)담론적 행위를 포함하는 언어사용의 심급	면대면 대화, 방송 프로그램, 대중집회, 주민공청회,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선거, 정당의 전당대회 등 일정, 부패·섹스·성범죄 스캔들 등
담론 유형 (discourse types)	사회정치적 토픽에 관한 특정한 언술체계와 언어적 장치들	이념적으로 신자유주의, 가부장제 담론, 핵심어로는 보편복지, 재정건전성 담론, 토픽별로는 실업 담론, 고령화 담론, 파워엘리트 담론, 세대갈등·세대불평등 담론 등

이 논문의 5장에 서술할 세대담론의 역사적 분석은 위의 <표 1>과 <표 2>에서 연회색 바탕으로 표시한 영역에서 ‘386’과 ‘청년’의 담론이 처음에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정치엘리트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 담론으로 출발했다가 점차 그 토픽, 담론의 유형, 그리고 담론 폭발의 계기가 된 사건의 측면에서 점점 확대되어 거대담론으로 변형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한편 아래의 <그림 2>는 담론의 역사적 동학을 분석하기 위해 보다(Wodak 2008)의 이론 모형을 변형시켜 재구성한 것으로, 담론유형 A가 지배적이던 시기로부터 담론유형 X가 지배적인 시기로의 이행과정을 보여준다. 굵은 겹선의 두 원은 각각 담론유형 A와 X의 범위에 드는 텍스트들이다. 각 시기의 ‘핵심 텍스트’는 A와 X의 요소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지만, 기타 텍스트들은 혼합된 형태다. 핵심 텍스트를 분석하여 우리는

각 담론유형의 상징과 의미구조의 전형성을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담론유형의 탄생과 확산 과정을 규명하려면, 옛 담론유형이 지배적이던 시기에 새로운 담론이 등장하는 사건인 ‘예견적 텍스트’를 찾아야 한다. 나아가 누가, 언제, 무엇을 위해 새 담론을 탄생시켰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그림 2> 담론유형과 텍스트 구성의 역사적 변화 모형



이 논문의 5장 1)절은 <그림 2>의 A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80년대 학번 정치엘리트에 초점을 맞춘 ‘386’ 담론과 바로 그 ‘386’을 뜻하는 ‘청

년'의 담론을 서술한다면, 2)절은 오늘날 지배적인 '진보 386'의 비난 담론과 그들에 의해 지배당하는 존재로 그려지는 '청년'의 담론이 최초로 탄생한 예견적 텍스트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어 3)절은 거기서 시작된 '386' 혐오 담론 및 그와 쌍을 이루는 '청년' 담론의 만개한 형상을 보여준다. 위의 그림의 X에 해당하는 담론 유형이다.

이상의 방법론적 원리에 따라 이 논문은 '86세대'(386, 486, 586) 담론과 '86-청년' 세대관계 담론의 상징적, 의미론적 원형(原型)의 탄생과 확대·변형 과정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의 분석결과 지난 30년 동안 각각 보수와 진보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386' 담론을 생산해 온 것으로 확인된(신진욱 2020)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대상으로 질적인 담론사 분석을 수행했다. 뉴스검색 전문 프로그램인 빅카인즈(BigKinds)와 아이서퍼(EyeSurfer)로 '386', '486', '586', '청년', '(386 OR 486 OR 586) AND 청년' 을 검색어로 1990년~2019년 시기의 보도기사, 사설, 칼럼의 텍스트를 수집하여 그중 단순한 사실 보도 텍스트를 제외하고 일정한 분량의 서사적 언술이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논문의 관심사는 언론사의 입장이 아니라 언론 지면에 등장한 담론이므로 외부기고자의 칼럼도 분석대상에 포함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논문에 인용된 모든 기사의 검색일은 동일하게 2019년 11월 4일이다.

4. 사회구조와 정치의 세대균열

1) 한국사회 세대균열의 중층구조

이 논문의 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오늘날 언론과 출판시장의 많은

대중적 담론에서 '86세대', '50대', '기성세대'가 '청년', '20대', '미래세대'에 대해 착취, 지배, '갑질'을 하는 세대관계의 상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3장 1)절에서 서술했듯이 고용, 소득, 자산, 주거, 자산, 각종 사회보장 부문 등 모든 측면에서 일관된 세대균열의 분할구조가 존재하는지, 정치 성향과 의식, 집단정체성의 측면에서도 세대균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등의 문제는 전혀 자명하지 않다. 즉 세대균열은 많은 단순한 세대담론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완전하고 복잡한 구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세대균열의 3차원 모형으로 본다면, '386 세대'와 '청년세대' 간의 위계적 균열을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명제가 아니라 거대담론으로 주장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구조의 모든, 혹은 최소한 많은 핵심 차원에서 동일한 세대불평등 분할구조가 존재하고, 둘째, 그러한 사회적 세대균열 구조가 정치적 태도와 의제로 구성되었으며, 셋째, 각 출생코호트의 구성원들이 상당히 구분되는 사회의식과 세대적 집단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최소한 이중 한두 측면에서라도 상당한 정도 세대균열의 존재와 작용을 논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기존 연구들의 결과는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386 대 청년'의 세대균열의 존재를 발견했으되 다른 여러 측면에서는 그러한 구도가 아니며, 유권자 정치성향이나 의식·정체성의 측면에서는 '386 대 청년', '50대 대 20대', '기성세대 대 청년' 등의 담론은 실재하는 균열과 일치하지 않는 허구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2천년대 들어 청년층이 열악한 삶과 노동의 조건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생애과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청년기에 겪는 어려움이 그 윗세대가 청년기에 겪었던 어려움이 다르

다는 것은 분명하다. 고용, 실업, 비정규, 소득보장 대책 등 여러 면에서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있어왔고, 산업팽창기 때와 전혀 다르게 오늘날 청년들은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구조적 위치에서 보다 안정적인 위치로 이행이 대단히 어려운 현실이다(박수명 2013; 최요한 2018).

그러나 청년층 내에 학력·성별·연령·숙련 등에 따른 불평등의 골이 간과할 수 없을 만큼 깊을 뿐 아니라, 2천 년대에 청년세대 내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왔다는 점을 우려하는 여러 연구가 있다(김영미 2016; 남재욱·김영민·한기명 2018; 오유진·김교성 2019; 이승윤·백승호·김미정·김운영 2017). 물론 세대 내 불평등의 존재가 세대 간 불평등과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 전체가 상승 또는 하강 이동을 한다 해도 세대 내 불평등이 클수록 동 세대가 ‘세대로서’ 함께 구조적 수혜자나 피해자로 간주될 수 있는 정도는 그만큼 약해진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각 세대의 고통의 높낮이를 비교하여 모든 면에서 청년층이 가장 열악하고 비관적인 위치에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지금 청년층은 오늘날의 중·노년층이 과거에 청년이었을 때 겪지 않았던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지만, 바로 그 구조가 오늘날의 중·노년층에게도 청년층과는 다른 형태로 많은 사회경제적 난관을 주고 있다. 청년층의 고통을 중시하기 위해 다른 연령대의 고통을 폄훼하거나 심지어 착취자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다.

대중적 세대담론에서 흔히 ‘불안정한 청년층’과 대비시키는 ‘안정된 기성세대’가 실제로 어떤 생애과정을 거쳐 왔고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 각도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세대론자들은 베이비붐 세대나 ‘386’ 세대의 기업 내 비중, 노동시장 생존기간, 자산 보유액과 자가취득 시점 등을 더 젊은 세대들과 비교하여 이들의 특권적 위치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특권성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는 식의 ‘존재명

제가 아니라, 모든 핵심적 측면에서 대체로 그러하다는 ‘전칭명제’가 논증되느냐다. “만약 각기 다른 차원에서 상이한 세대관계가 존재한다면, 특정한 형태의 세대불평등을 일반화하는 언설은 단지 ‘과장’이 아니라 현실의 여러 얼굴 중 하나만을 보여주는 ‘왜곡’이 된다.”

직업적 생애과정의 면에서 신동균(2013)의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생을 포함하는 베이비 붐 세대는 1980년대 고도성장기에 생애 주(主)직장에 가장 일찍 정착한 세대였지만, 또한 1997년 금융위기 후엔 이미 40대 후반 연령부터 생애 주직장 생존율이 급락한 세대이기도 하다.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2010년대에 베이비부머 또는 ‘86’ 세대인 50대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그보다 더 젊은 모든 세대보다 높았고, ‘청년’인 20대 연령계층이 그 뒤를 이었다(이승운, 2019: 29).

소득 측면에서 신광영(2009)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서 소득불평등의 악화 원인을 분석하여, 불평등 심화가 세대 간 불평등이 아니라 세대 내 계급불평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장년층과 노년층으로 갈수록 세대 내 계급불평등이 더 악화되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고, 보다 최근에 윤종인(2018)의 연구 역시 소득분배 지표의 연령 프로파일이 1960년대생과 그 이상의 모든 코호트에서 40대 이후 연령부터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복지 부담과 수혜의 측면에서, 86세대가 자신들의 복지를 위해 청년층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식의 세대담론을 흔히 접하게 되지만 실제로 복지의 세대 간 분배구조는 복잡하다. 국민연금의 세대 간 회계와 형평성에 관한 최기홍(2016)의 분석에 따르면, 보험료율 대비 급여수준으로 측정할 수익성은 노인층이 가장 높았고 가입률·가입연수를 반영한 순혜택은 1970년대 중후반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재욱(2018)의 연구에 따르면 2천 년대 한국에서 복지 확대의 최대 수혜자를 연령별로 보면 바로 노인층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정해식·주은선(2019)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폐쇄 시점에 따라 모든 연

령대가 각기 다른 이익과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마치 일괄적인 세대별 손익구조가 있는 것처럼 세대갈등의 정치를 펼치는 것보다 최선의 공동선을 위한 세대 간 연대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처럼 특정 세대가 모든 측면에서 일관되게 다른 세대보다 더 안정되거나 불안정한 세대불평등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가 각기 다른 구조적 상황에서 세대특유의 문제와 자원을 갖고 있는 중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정치와 의식의 차원에서 세대균열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기로 한다.

2) 정치와 의식 차원에서 세대균열

한국 정치에서 세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진민(2012), 정진민·황아란(1999) 등이 선구적으로 관심을 환기시켰고, 이내영(2002)은 한국의 세대별 이념성향의 차이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대단히 크다는 것을 일찍이 주목한 바 있다. 한국에서 민주화 이전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도농 균열이 커서 ‘여촌야도(與村野都)’의 경향이 자주 관찰되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출신지역에 따른 지역주의 투표가 강하게 지속됐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부터 유권자의 연령대에 따라 후보 선택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그 차이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 시점부터 한국 정치에서 세대균열 현상, 특히 청년층의 진보적 투표 성향과 탈물질주의적 가치 지향을 주목하는 많은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강원택 2003; 2011; 김욱 2007; 최준영·조진만 2005).

위와 같은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2천 년대 한국정치에서 세대균열의 상대적 중요성을 계급균열과 비교 분석한 여러 연구가 나왔다. 전병유·신진욱(2014)은 2003년~2012년 대선과 총선을 분석하여 계급 변수와 연령

변수가 함께 작용했음을 발견했는데, 특히 이 연구는 저소득층이 더 보수적인 것처럼 보이는 '계급배반 투표' 현상이 많은 부분 보수성이 강한 노인층 내에 저소득자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많기 때문에 생기는 연령 효과임을 밝혔다. 한귀영(2012; 2013)도 저소득층의 보수적 정치성향이 2007년 대선부터 나타났는데 1960년대생 이하 연령층은 학력·소득 하위 계층이 진보적 투표가 더 많은 반면 1950년대 이상 연령층은 하위계층에서 오히려 보수 투표가 더 많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연령대별 투표 성향의 추이를 더 자세히 보면, 1997년 대선에서는 연령대 간 후보 선택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2002년 대선 때는 당시 20~30대였던 1960~70년대생의 진보 유권자와 당시 40대 이상이었던 1950년대생 이상 보수 유권자의 차이가 꽤 벌어졌다. 2007년 대선 때는 이 차이가 좁혀졌다가 2012년 대선에서는 2002년보다 훨씬 더 벌어져서 당시 20~40대였던 1960~80년대생은 진보 성향이, 당시 50대 이상 연령대였던 1950년대 및 이전 출생 유권자는 보수 성향이 해당 연령대 내에서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노환희·송정민·강원택 2013: 128).

2천 년대 대선과 총선을 함께 분석한 박원호(2012)의 연구에 따르면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후보를 선택한 비율이 20~30대 청년층과 더불어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높았던 데 반해,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비율은 20~30대에서 가장 높고 그보다 높은 연령대로 갈수록 가파르게 하락하여 연령에 따른 정치성향의 균열이 더욱 분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분명해지는 사실은, '86세대'라 불리는 1960년대생은 그보다 젊은 유권자층에 더 가까운 정치성향을 대체로 보여왔으며 어떤 경우에도 1950년대생이나 그 이상 연령대와 가까워졌던 적은 없다는 것이다.

좀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하나의 '정치세대'로서 가장 주목을 받아온 '386 세대'가 과연 얼마만큼, 어떤 종류의 세대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연구가 있다. 노환희 외(2013)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4번의 대선에서 기간효과를 통제하여 각 출생코호트의 후보 선택과 이념 성향 추이를 분석했는데, 한국전쟁 세대(1941년 이전 출생)와 산업화 세대(1942~51년 출생)는 나이가 들면서 크게 보수화되는 연령효과를 뚜렷이 보인 데 반해, 386 세대(1960~69)는 대체로 중도 또는 중도진보 성향을 유지하는 세대효과를 보였고 1970년대 이후 출생 세대는 일관되게 그 앞 세대들보다 더 진보적이었지만 진보성의 정도는 등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내영·정한울(2013)의 2002년~2012년 대선 분석에서도 ‘386 세대’가 앞세대보다는 진보적이고 아랫세대보다는 보수적이며, 1953년 이전 출생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보수화되는 뚜렷한 연령효과가 있었던 데 반해 1973년 이후 출생자들은 것처럼 연령이 높아지면서 보수화되는 효과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자면 1950년대생과 그 앞세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보수화된 데 반해, 1960년대생과 그 뒷세대는 그런 연령효과를 약하게 보였고 특히 1960년대생은 중도 또는 중도 진보 정도의 성향을 다른 세대보다는 안정적으로 보여 왔다는 것이다. 물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960년대생과 그보다 젊은 세대들도 선거 때마다 변화를 보였고, 그 미세한 변화가 때론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7년~2017년의 20년간 6차례 대선에서 출생 코호트별 투표 성향을 분석한 배진석(2017)의 연구에 따르면, ‘386’으로 불리는 1960년대생은 1997년, 2002년, 2017년에 3번 진보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고, 1992년, 2007년, 2012년에 마찬가지로 3번 보수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다. 오세제(2015)의 연구도 ‘386 세대’의 세대효과가 각 선거에서 정치적 동원의 성공 여부에 따라 조건적으로 표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많은 세대담론이 ‘진보 386 세대’를 청년층의 ‘탈이념, 탈정치’와 즐겨 대비시켜 왔으나, 정작 1970년대 및 그 이후 출생 세대의 실제 이념성향

과 투표성향은 진지하게 주목받지 못했다. 위의 여러 연구에서 이미 이들 1970~80년대 출생 세대가 지난 20년간 '386 세대'보다 언제나 더 진보적인 투표 성향을 보여 온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았다. 황아란(2009a)의 연구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특히 1967년~1971년 출생 세대가 세대 내 학력 차이를 뛰어넘어 이념성향의 동질성이 다른 세대보다 강하고, 높은 정치 참여와 진보 성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 황아란(2009b)의 다른 연구는 세대별로 정치적 가치관(질서, 자유, 평등), 정치적 관심도, 촛불시위 등 정치참여도를 분석했는데, 여기서도 이 세대는 자유 지향이 강하고, 정치에 적극 관여하며 진보 성향 정당을 많이 지지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현재 진보 386 집단이 권력을 쥐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386 세대라고 불리는 50대가 아니라 30~40대에서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한편 의식과 가치지향, 정체성의 측면에서도 여러 사회학적 조사들은 '안정된 기성세대'와 '불안정한 청년층'의 대비, 또는 '청년세대 대 기성세대의 반목'이라는 프레임을 가진 세대담론과 상당히 다른 결과를 얻었다. 김석호(2018)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이용하여 출생 코호트별로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86 세대'로 불리는 1960년대생 집단이 '노오력하면 된다'는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며 그 이후 세대들만 미래의 계급이동 가능성을 비관하는 것도 아니다. 2014년 조사에서 1960년대생부터 1980년대생까지 모두 이동성을 낮게 평가했고, 2005년 조사에서는 심지어 60년대생이 가장 비관적이었다. 한국사회 분배공정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세대에 따른 차이보다 세대를 가로지르는 변화가 두드러진다. 2003년~2014년의 십년 간 모든 코호트에서 분배공정성 평가가 급락했고, 그나마 비관이 가장 완만하게 커진 집단은 이 시기에 20대~40대를 거쳐 간 1970년대생이었다.

한편 최섯별(2018)은 각 세대가 어떤 다른 세대의 삶의 고난에 가장 공

감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88만원 세대'(1980~92년생)는 현재 50대와 60대를, 'X세대'(1970~79년생)는 현재 60대와 70대를 꼽아서 자신의 부모 세대에 적대감을 갖기는커녕 부모 세대의 삶의 고난에 대해 가장 큰 연민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들의 분노가 특정 '세대'에 대한 것이라는 단정에서 출발하는 오늘날의 많은 청년담론은 실제 청년들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년들이 기성세대의 연령에 있는 기득권층과 반목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기성세대'와의 반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5. 세대불평등 담론의 유래와 구조

앞에서 이 논문은 (1) 고용·소득·사회보장 등 여러 측면의 사회구조적 분할, (2) 유권자 정치성향과 선거에서의 투표선택, 그리고 (2) 사회의식과 세대적 정체성이라는 3차원 모형으로 선행연구의 결과를 검토했다. 그 결과 '86세대 대 청년세대'라는 세대균열이 비록 특정 부문에서는 존재하지만 더 많은 측면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경험적 대상에 관한 미니이론으로는 타당하지만 한국사회의 거시적 균열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 5장에서는, 그렇다면 경험세계의 그러한 복잡성을 단칼에 제거하고 '86세대, 50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모든 것을 독점하여 청년을 지배하고, 착취한다'는 식으로 현실을 단순화하는 세대담론을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떤 서사와 상징적 장치들로 생산해내고 확산시켰는가?라는 질문을 다룬다. 연구결과는 '386 세대론'이 김대중 정부 때 처음 탄생하여 대체로 긍정적 기대 또는 중립적 기술을 담은 담론으로서 확산되기 시작했지만, 노무현 정부 중반기부터 보수 언론이 진보 엘리트 집단을 공격하는 이념적,

정치적 담론으로 질적 변화를 겪은 뒤에 이명박 정부 시기까지 몇 가지 주요 프레임의 윤곽을 완성시켰으며, 보수 권력이 안정기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시기에 다소 누그러들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2017년부터 다시금 ‘386 혐오’ 담론이 보수 언론을 무대로 부상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1) ‘청년 386’ 담론의 탄생

최초로 정치적 의미를 갖는 ‘386 세대’의 호명이 나타난 시간, 장소, 주체를 확신을 갖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빅카인즈 뉴스 검색 프로그램으로 추출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1997년 11월 13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고(故) 구본준 기자의 기사였다. 이 기사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위해 거리로 나섰던 ‘모래시계’ 세대들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30대 나이,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한 이른바 ‘386’세대 1422명이 서명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청년선언’을 발표”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1)

이후 여러 매체에서 ‘386 세대’ 담론이 부상하기 시작한 시점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 초기인 1999년인데, 그해 3월에 「서울신문」에 당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이었던 고(故) 성유보 씨가 쓴 “386 세대”라는 제목의 특별기고가 실렸다.²⁾ 여기서 필자는 ‘386 세대’가 “정의감이 가장 민감한 청소년기에 ‘광주사태’를 보았고, ‘민주주의를 외치며 도서관에서 투신해 죽어가는 선배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민주적 사회의식’의 형성, 이것이 ‘386 세대’가 집단적으로 체득할 수밖에 없었던 자아 의식인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성유보 씨는 “‘386세대’여, … 그대들은

1) 「한겨레신문」. “80년대 민주화운동 1422명 ‘정권교체 열망 청년선언’ 발표.” 1997. 11. 13.

2) 성유보. “386세대.” 「서울신문」. 1999. 5. 3.

지금의 ‘젊은 정열’을 오래오래 가슴에 담으면서 자기분야에서 전문성을 ‘486’ ‘586’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해나가기를 바란다’는 바람으로 글을 마쳤다.

이 시기에는 「조선일보」도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386 세대’에 대한 기대를 아낌없이 표현했다. 1999년에 조선일보는 “한국의 주력 386 세대”를 주제로 무려 38회짜리 특별기획을 내보냈는데, 그 주제는 “달한 공무원조직 열어 제쳐라”(1999년 4월 19일), “열린 학교’ 우리가 만든다”(1999년 5월 24일), ““땡전 뉴스”는 박물관에나 가라”(1999년 9월 27일), ““대의’를 위해 ‘나’를 던졌다”(1999년 10월 25일) 등이었다. 이 시기에는 강기정, 김부겸, 이상호, 이인영, 임종석, 최재성 등 민주당 계열 정치인뿐 아니라, 원희룡, 남경필 등 보수 정치인들도 ‘386 세대’의 이름으로 함께 거론되었고 ‘여야 386’이라는 용어도 흔하게 사용되었다.³⁾

이런 맥락 위에서 2000년 4월의 제16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1999년 말에 ‘여야 386’ 정치인들이 대거 앞 세대 기성 정치인들과의 경쟁에 뛰어들었다. 임종석 전 전대협 의장, 이상호 전 연세대총학생회장, 이인영·오영식 전 고려대총학생회장 등이 대표적이며, 보수 쪽에서는 원희룡, 박종운, 정태근 등 한나라당 정치인들이 ‘386 주자’로 거론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제16대 총선 후보를 분석한 기사에 따르면, 전체 후보자 중 60대 이상의 비율이 22.1%로 제15대의 두 배 이상이었고, ‘386 세대’로 불리는 30대 후보자도 13.3%로 제15대의 15.6%보다 하락했다. ‘386 정치인’의 부상은 단순히 60년대 출생 연령층의 양적 비율이 아니라, 정치권 세대교체라는 의미에서 그들이 갖는 중량감에 기인했음을 시사한다.⁴⁾

요약하자면 ‘386’ 담론이 처음 탄생한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3) 「서울신문」. “여야 386세대 연대 추진.” 2000. 4. 20.; 「매일경제」. “여야 386세대 연대 본격화.” 2000. 4. 21.; 「한겨레신문」. “‘새정치’ 여야 386 ‘망월동 결의.’” 2000. 5. 18.

4) 「매일경제」. “16대 총선 후보 분석.” 2000. 3. 29.

이르는 시기 동안에 '386'은 진보·보수 등의 특정 이념이나 정치 진영에 국한되지 않은 세대 개념이었고, 그 중 특히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사회 각 부문으로 진출한 엘리트 세대집단을 지칭했다. 그리고 그들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공동의 경험,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지향을 갖고 있는 세대집단으로서 권위주의 체제에 익숙한 당시의 중·노년층, 특히 정치사회 부문의 기득권 집단과 구분되며 또한 그들에 도전하는 세대로 의미화되었다.

이 시기에 '386 세대' 담론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1960년대생 코호트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에 따르면 1980년~1989년 시기 대학진학률 평균은 35.7%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논문의 4장에서 제시했듯이 2002년 대선부터 1960년대생 유권자들이 직업, 소득, 학력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당시 권위주의적인 중·노년층에 비해 확연히 진보적인 이념성향과 투표선호를 보였고, 이 시기의 '청년 386'에 대한 담론들이 정치권의 신진 세력을 지칭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단계의 '386'과 '청년' 세대담론은 당시의 객관적 정치균열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현실의 상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대담론들이 보수 진영의 이념적, 정치적 공격수단 중 하나로 동원되고 조작되기 시작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다.

2) '386' 혐오 담론과 청년착취론의 탄생과 확산

2000년을 전후한 시점에 최초로 대중화된 '386' 담론에 분명한 변화가 발생한 시점은 80년대 민주화운동 세대가 권력 중심부로 진입해 들어가기 시작한 참여정부 시기였다. 특히 정권 후반기에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현저히 추락하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모든 지자체장을 석권하는 압승을 거둔 후부터 '386 세대' 정치엘리트를 비

난하고 조롱하는 담론이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러한 담론유형은 ‘뉴라이트’가 정치권력으로 들어간 이명박 정부 시기까지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386 세대’는 민주화운동 경험과 변혁적 가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제 오만한 지배권력이 되었다는 ‘기득권론,’ 무능하기 짝이 없으면서 패거리 네트워크로 집단권력을 유지한다는 ‘무능론,’ 청년층의 희생과 미래부담을 착취하여 세대지배를 자행한다는 ‘청년착취론’ 등, 일련의 새로운 담론유형이 이 시기에 틀을 갖추었다.

(㉠) 기득권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추락했던 집권 후반기인 2007년에 당시 조선일보 문화부 차장 대우였던 이한우 씨는 “‘정치하는 386’의 굴욕”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는데 이 텍스트는 이후 십여 년 동안 확대·진화하는 정치적 386담론의 시초 중의 하나다. 여기서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386세대와 포스트386의 연합”의 결과였지만 “대선 이후 386들이 보여준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N세대는 점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열정만 있고 실무능력은 떨어지는 386의 패거리 지향은 어느새 개인 중심의 가치관으로 무장한 20대들의 혐오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하는 386’과 ‘생활하는 386’의 분화”가 일어났고 “‘생활하는 386’이 ‘정치하는 386’에 대해 갖는 감정은 어쩔 수 없이 애증(愛憎)”이라고 하면서, 세대 간 분리(386 패거리) 대 ‘개인 중심 20대’)와 세대 내 분리(‘정치하는 386’ 대 ‘생활하는 386’)의 담론을 결합시켰다.⁵⁾ ‘진보 386 정치엘리트’를 동세대 모든 다른 계층, 그리고 청년세대에 대립시키는 구도다.

그러나 ‘기득권 386’과 ‘생활인 386’을 구분하는 담론은 그리 확산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386 기득권’ 담론은 1960년대생 전체에 대한 세대론적 비난 담론과 모호하게 중첩되었다. 그러한 담론적 확장 과정을 박

5) 이한우. “‘정치하는 386’의 굴욕.” 『조선일보』. 2007. 8. 3.

근혜 대통령 집권 첫해인 2013년에 여러 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해에 한국의 교육현실을 보도하는 조선일보의 한 기사는 “자본주의와 교육열이 만들어낸 ‘사교육 메카’ 서울 대치동, 21세기 들어 대치동을 더욱 대치동답게 만든 건 386세대였다”고 하면서 진보운동 참여경험을 가진 ‘생활인 386’의 삶의 모습과 비루함을 적어나갔다.⁶⁾ 같은 해 조선일보의 또 다른 기사는 세대불평등의 의미에서 비난의 대상을 진보적 생활인 386에서 더 확대하여 ‘1960년대생’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 이 기사는 ‘60세 정년’을 규정하는 고령자 고용축진법의 국회통과를 보도하면서, ‘386 세대’가 “한국사의 음지가 양지로 변하는 변동기에 늘 시대의 문을 열고 들어간” “대한민국 최대 행운아”이며, 고교평준화, 졸업정원제, 민주화 성공, 졸업 후 3저 호황기, 사교육 열풍의 수혜, 노무현 시대의 권력까지, 이 모든 좋은 것을 순전히 운으로 다 가져간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다.⁷⁾

(L) 무능론: ‘386세대’ 또는 ‘진보386’을 능력도 없으면서 권력만 있는 집단으로 묘사하는 담론들의 유래 역시 노무현 정부 후반기로 초점이 맞춰진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 당시 「빅뉴스」 대표였던 변희재 씨는 조선일보 칼럼에서, 사상이나 가치보다 “386세대의 더 중요한 공통점은 오히려 그들의 패거리 문화에 있다. 이는 … 한국사회의 출세와 권력의 법칙이다. … 운동권 시절부터 이어온 끈끈한 학맥과 지연으로 얽히면서, 386세대는 거대한 지배그룹을 형성·유지해왔다. … 실력이 안 되는 자들, 소비자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퇴출당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⁸⁾ 이어 그는 “1970년대 이후 태생, 이른바 ‘포스트386세대’는 문화의식에서부터 386세대와 판이”하며, “조직도, 깃발도, 리더도 없는 포스트386세대의 민주적 절차와 시장에 의한 세대교체 혁명이 이뤄

6) 「조선일보」, “386 운동권 강사들의 ‘대치동 잔혹사’.” 2013. 4. 27.

7) 「조선일보」, “祝福 받은 386. IMF 구조조정도 피하더니 ‘60세 정년 연장’도 수혜.” 2013. 5. 11.

8) 변희재, “‘포스트 386세대’가 움직인다.” 「조선일보」, 2007. 9. 29.

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⁹⁾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에 ‘진보386’ 담론의 비난의 대상은 정치권의 특정 집단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사회 전반의 진보적 엘리트 집단 전체로 확대되었다. 주목하게 되는 사례는 조선일보 논설위원 권대열 씨가 2010년에 쓴 칼럼인데,¹⁰⁾ 여기서 그는 ‘기득권 진보좌파 386’의 범위를 정치권을 훨씬 넘어 정부, 법원, 언론, 대학 등 모든 사회분야로 확대시키고 있다. “386은 민주·민중·민족·자주·반미·주사(주체사상)·분배·평등·저항과 같은 단어들과 함께 자랐다. … 그 사이 세월이 흘러 386은 이제 모두 486(40대)이 됐다. 직책도 부장판사, 부장검사, 중앙부처 국장급, 대기업 이사, 책임 PD급, 보직교수로 올랐다. 마침내 ‘세상을 움직일 위치’ 언저리로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이처럼 ‘386’은 단지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부문에서 기득권층이 되었다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이 칼럼의 메시지는 “이런 운동권 수준의 사고가 통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었다.

(c) 청년착취론: 이명박 정부시기에 들어와서 일어난 또 하나의 중요한 담론적 변화는 ‘386 무능론’에 ‘청년착취론’이 덧입혀졌다는 점이다. 2008년 당시 조선일보 파리특파원이었던 강경희 씨는 프랑스 68세대와 한국 386세대를 비교하는 칼럼에서 “기득권층을 향해 돌을 던진 68세대는 정작 기득권층이 되어 후대에 빛만 떠넘긴 이기적인 세대라는 악평을 받게 됐다”고 하면서, 그점에서 한국에서 “민주화의 주역이라는 … 386세대도

9) 이처럼 ‘386’에 대항하는 청년그룹을 조직화하는 시도가 바로 다음 해에 실행됐다. 2008년 5월 16일에 20~30대 기업인 단체인 ‘실크로드CEO포럼’이 변희재 씨를 초대 회장으로 하여 창립되었다. 곧이어 2008년 7월에 변희재·여원동의 『코리아 실크세대 혁명서』(생각나눔)가 출간되었는데, 여기서 저자들은 ‘권력형 386세대’과 우석훈·박권일의 ‘88만원 세대론’을 함께 비판하며 IT, 대중문화로 무장한 20대 대안론을 주장했다. ‘실크로드CEO포럼’의 이사 중 한 명이자 당시 동국대 재학생이었던 정모아 씨는 “나는 88만원 세대라 불리기 싫다”(『민족일보』, 2008. 9. 11.), “낡은 386은 가라! 실크세대가 나간다”(『조선일보』, 2009. 2. 17.) 등의 글을 기고하는 등, 이 그룹의 청년들이 담론형성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10) 권대열, “사회 말석 ‘386’이 주요 간부 ‘486’ 되니.” 『조선일보』, 2010. 1. 29.

정작 기득권층이 되어서는 그리 신통치 못한 통치 능력을 보였다”고 적고 있다.¹¹⁾ 여기서 주목할 점은 ‘386,’ ‘민주화,’ ‘기득권,’ ‘무능’이라는 기존의 담론요소에 ‘후대에 빗만 떠넘긴 이기적인 세대’라는 세대 간 관계의 서사를 연결시키고 있는 지점이다. ‘민주화’가 ‘기득권’으로 연결되고, ‘민주화 기득권’이 ‘청년세대의 희생’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당시 조선일보 논설실장이던 송희영 씨 역시 2008년의 한 칼럼에서 “현재 20대 근로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20대 초반의 경우 3명 중 2명이 비정규직”인데 “꼴깍거리 베이비 붐 세대를 떠맡을 그 세대는 알바나 파견사원으로 평생을 보낼지 모른다는 절망감에 싸여 있다. 이 얼마나 끔찍한 미래인가. 그 세대는 386들까지 기득권층으로 몰아세우고, … 그들의 촛불이 언제 햇불이 되고, 이어 짱돌과 화염병으로 변할지 알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하여 ‘기득권층 386’과 ‘절망적 비정규직 20대’를 대립시키고 있다.¹²⁾ 그런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이 칼럼이 나온 시점에 가장 빠르게 비정규직 비중이 상승하고 있었던 연령대는 바로 50대와 60대 이상이었고, 2016년에 이르면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바로 ‘86세대’인 50대였다.

물론 담론의 거시적 변화는 어떤 집단의 통일된 전략에 의해 조직적으로 감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보수’가 단일한 진영을 갖추어 일사불란하게 담론의 전환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2007~2010년의 담론 전환기에 보수 진영 내에서 여전히 초기 386 담론을 발화하는 영향력 있는 행위자도 있었다. 그 한 예로 원희룡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한 신문기고에서 박연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몇몇 386 정치인에게 비화되면서 386이 부패·무능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부각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11) 강경희, “프랑스 68세대와 한국 386세대.” 「조선일보」. 2008. 5. 19.

12) 송희영, “88만원 세대에 떠넘겨질 惡性 부채.” 「조선일보」. 2008. 6. 14일.

없다”는 심정을 토로하면서, 그러나 “대다수 386세대는 우리 사회의 ‘허리 세대’로 각 분야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고 “이제 우리 세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¹³⁾ 이 논문의 <그림 2>의 담론사 모형으로 말한다면, 담론유형X가 지배적으로 된 후에도 담론유형A의 요소가 잔존하는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 ‘386’ 정치인들이 정치권 내 입지가 커지고 세력화함에 따라 한겨레신문의 지면에도 이에 대한 비판적 보도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한겨레신문 지면의 텍스트들은 ‘386 이후’의 젊은 세대의 의미와 역할을 부각시키는 맥락에서도 세대갈등보다는 세대연대를 강조하는 담론이 지배적이었다. 예를 들어 보수언론에서 ‘386’ 비난 담론이 최초로 폭발했던 2007년에 서울대 국사학과 정용욱 교수는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386 세대가 지향했던 정치적 민주화의 가치들을 사회적·경제적 민주화로 확대하면서 386 세대에서 엑스세대로, 또 엔세대로 이어지는 새로운 세대적 경험을 정치권에 수혈하고,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치발전의 대계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¹⁴⁾

대규모의 촛불집회가 일어난 2008년은 ‘386 세대’와 ‘촛불세대’의 소통, 공감, 연대를 말하는 담론이 한겨레신문에서 대대적으로 생산된 시기다. 2008년 5월의 촛불집회 보도기사는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10대들의 ‘배후’는 누구일까? 전문가들은 이들 10대의 부모인 이른바 ‘386 세대’를 지목한다.¹⁵⁾ 1980년대 민주화 시대를 거친 부모의 사회비판적 ‘유전자’가 자녀들한테 자연스럽게 전이됐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는데, 이때를 전후하여 연세대 김호기 교수의 “쌍방향 소통 ‘2.0세대’” 등 한겨레 지면의 여러 칼럼이 새로운 세대를 주목하면서 앞 세대들의 적극적 소통과

13) 「중앙일보」, “원희룡, “386 정치, 뼈를 깎는 반성이 선행돼야.” 2009. 4. 28일. 원희룡 의원의 기고문 제목은 “386과 함께 386을 넘어서야.”

14) 정용욱, “한국 정치의 세대교체법, 그리고 386.” 「한겨레신문」, 2007. 1. 8.

15) 「한겨레신문」, “386부모 ‘뜨거운 피’ 물려받았다.” 2008. 5. 14.

관심을 호소했다.¹⁶⁾ 같은 사회, 같은 시대에 각각 보수와 진보 성향을 대표하는 언론매체 중 하나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이처럼 ‘세대’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담론화하고 있었다.

3) ‘조국’ 현상과 ‘386’ 혐오 담론의 확장

보수 언론의 ‘386’ 혐오 담론은 박근혜 정부시기에 와서 다소 축소되었다가,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북미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뒤인 2019년 초에 다시금 빠르게 부상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경제부 김신영 차장은 2019년 초에 “싫다, 386이 만든 세상”이라는 제목을 칼럼에서 “한국 사회에 전에 없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 정권과 청년의 충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 지지율이 1년째 곤두박질이다”라고 상황을 규정했다.¹⁷⁾ 노무현 정부 후반기인 2007년에 보수 언론의 정치담론으로 부상한 ‘386’ 혐오 담론이 10년여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금 거의 동일한 담론구조로 재등장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2018년에도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연평균 64%에 이르렀고 20대~40대가 그 주요 지지층이었던 상황에서,¹⁸⁾ 보수 언론들은 ‘386 세대’와 ‘청년세대’가 극렬히 반목하고 있는 현실의 상을 대량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 시기에 20대의 문대통령 지지율은 미투 운동을 거치면서 연령대 내 성별 격차가 커진 결과로 전년도보다 하락했지만 여전히 중·노년층보다 높았고, 30대는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였다.

16) 김호기, “쌍방향 소통 ‘2.0세대.’” 『한겨레신문』, 2008. 5. 15.

17) 김신영, “싫다, 386이 만든 세상.” 『조선일보』, 2019. 2. 23.

18)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18년 1~12월 월간 통합 자료.” 2018. 12. 24.

2017년 제19대 대선 시기에 강원택·성예진(2018)이 수행한 연령대별 의식 조사에서 20~30대는 진보적인 이념성향을 가진 집단이 가장 많은 세대로 나타났고, 청년층 내 진보적 이념 집단 중에서 민주당·정의당 지지율은 58.9%나 된 데 반해 청년층 보수이념 집단 내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자 비율은 19.7%에 불과했고 ‘지지정당 없음’이 46.1%에 달해서, 40~50대 보수이념 집단 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40.3%, 60대 이상에서 53.0%에 달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었다. 진보적 청년이 민주당·정의당에서 등을 돌린 면보다 보수적 청년이 기존 보수정당에 등을 돌린 면이 훨씬 강했던 것이다. 이처럼 ‘진보386’과 ‘청년’을 대립시키는 세대담론은 현실의 반영이기보다는 현실을 왜곡하는 허구에 가까웠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386’ 담론들은 세대론의 외양을 갖춘 공격적 출판물들을 적극 활용하여 ‘50대’를 주요 희생양으로 삼아 세대 간 혐오를 증폭시켜 ‘청년’을 고객으로 불러들였다. 조국 논란이 일어나기 전인 2019년 7월에 조선일보 Books 팀장인 이한수 씨는 신간 『386 세대유감』 주목했다.¹⁹⁾ “꿀 빨아먹고 헬조선 만든 세대, (후배들이 올라올) 사다리 걷어찬 세대, 무능한 끈대 집단…”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30대, 40대 저자들의 “갈날은 현 정권만이 아니라 386 세대 전체를 겨누고 있습니다. 386 세대는 매년 높은 연봉 인상으로 시드머니를 손에 쥐었고, 청약통장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기에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린 ‘로또 세대’라는 겁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주말뉴스부장 어수웅씨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출 10억 끼고 산 흑석동 재개발 상가주택의 25억짜리 ‘딱지’. 그때는 마침 문재인 정권이 한참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치르던 시절. 82학번

¹⁹⁾ 이한수, “편집자 레터, 386 세대유감.” 『조선일보』, 2019. 7. 20.

‘청와대의 입’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386 세대의 위선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는 겁니다”라고 비난하면서, “80년대 후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20대를 불살랐던 ‘노력’으로 성취한, “386 끈대”가 아닌 ‘밀레니얼 끈대’에게서 희망을 봅니다”라고 말하면서 한편에 불공정한 기대권을 누리고 있는 1960년대 출생 ‘386 세대’를, 그 반대편에 이들 기성세대 때문에 현재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를 대립시켰다.²⁰⁾

조국 논란이 개시된 직후에 조선일보는 우석훈 씨와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여기서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인싸(인사이드를 줄인 말)’라는 말이 왜 유행하졌어요? 자기네(386세대)끼리 다 해먹는다,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할 겁니다”라는 우석훈 씨의 ‘청년’ 대 ‘386’의 이항대립 담론이 부각된다.²¹⁾ 8월 26일에는 “입으로만 부르짖는 공정·정의 진보 끈대들의 위선이 역겹다”는 강렬한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고, 같은 신문의 김윤덕 문화부장은 칼럼에서 “염병과 짱돌로 민주화를 얻었으나 풍요 경제의 단맛을 즐기느라 자식 세대의 궁핍은 외면했다. 386은 훈장이었고, 촛불은 과거를 추억하는 놀이터였다. 부끄러움은 잊었다”라고 신랄히 비난했다.²²⁾

이런 담론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나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비판이 과도했다거나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류의 것이 전혀 아니다. 문제는 그러한 정치적 논란이 “현 정권만이 아니라 386세대 전체”의 문제며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386 세대의 위선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담론화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는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을 1960년대 출생 연령대 전체의 문제로 허위 일반화하는 것이며, 그렇게 권력투쟁의 문제를 세대갈등의 문제로 전치시

20) 어수용, “386 끈대 對 ‘밀레니얼 끈대.’ 「조선일보」, 2019. 8. 17.

21) 「조선일보」, “권력 독점한 386 핵심세력, 프랑스 68세대보다 더 위험.” 2019. 8. 22.

22) 김윤덕, “하어 친구여,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조선일보」, 2019. 10. 1.

키는 것을 통해서 단지 ‘조국 장관에 반대하는 청년’이 아니라 ‘청년’이라는 연령계층을 정치적 우군으로 재현하는 담론적 실천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시기에 와서 한겨레신문 같은 진보 언론에서도 2019년에 정치권내 386그룹에 대한 비판을 훨씬 뛰어넘어 일반화된 ‘386 세대’ 비난, ‘진보 386’ 공격의 담론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 현상은 ‘조국 사태’가 터지기 몇 달 전에 이미 나타났다. 이제 곧 정국을 지배하게 될 거친 담론들이 2019년 7~8월에 대거 등장했다. 이때 나온 몇몇 세대론적 출판물을 집중 보도한 이 기사들은 “헬조선은 386세대가 만들었다는 논쟁적 주장,” “권력 장악 ‘막강 386세대’ 양보해야 자녀 세대가 산다” 등의 선정적 제목을 달고 있었다.²³⁾ 이들은 앞에 서술한 조선일보 지면의 세대 담론과 유사한 방식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문제를 ‘진보 세력’의 문제로 이념화하고, ‘386 세대’의 문제로 세대화하여 보수층·청년층으로 반향을 확장했다. 이런 류의 담론은 한겨레신문의 지난 20여 년의 담론사에 없었던 초유의 사건으로, 비록 해당 매체의 전체 담론에서 비중이 크지 않다 해도 역사적으로 의미심장하다.

이로써 한겨레 내부에 이질적이고 상충되는 담론이 공존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한겨레신문의 중요 언론인인 성한용 씨는 한 기고에서, “기득권 세력이 ‘세대’를 들고나온 것은 노무현 정부 때였다.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싼 운동권 출신 386들이 나라를 망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 명박박근혜 10년을 건너뛴 문재인 정부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조국 사태로 세대갈등론의 서식 환경이 좋아졌다고 보는 것 같다”고 비판하면서 세대론적 프레임과 특히 386책임론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²⁴⁾

23) 「한겨레신문」, “헬조선은 386세대가 만들었다는 논쟁적 주장.” 2019. 7. 18.; 「한겨레신문」, “권력 장악 ‘막강 386세대’ 양보해야 자녀 세대가 산다.” 2019. 8. 11.

24) 성한용, “조국 사태, 세대가 아니라 계급이 문제다.” 「한겨레신문」, 2019. 9. 16.

외부 기고에서도 같은 시기에 유사한 대항담론이 나왔다. 양의모 씨(히토쓰바시대)가 쓴 기고문은 “세대갈등론은 그 기만성이 입증된 주장”이고 “자식의 일자리를 아버지가 빼앗는다는 단순한 논리는 언뜻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회경제적 문제를 ‘노노 갈등’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으로, 자본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보수언론은 그렇다고 쳐도 진보언론마저 이런 철 지난 주장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²⁵⁾ 노무현 정부 시기에 보수 진영이 탄생시켜 키워온 ‘386 혐오’ 담론이 약 십 년 후에 진보 매체에 들어오면서 세대론을 둘러싼 담론 투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6. 결 론

이 논문은 1987년 민주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2년 대통령 선거 등 몇몇 역사적 사건을 포함하는 지난 수십 년간의 국내외적 구조변동 과정에서 한국사회에 세대에 따른 생애과정의 재구조화와 정치경제적 균열이 부상했음을 주목하는 데서 출발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 과정에서 점차 확산된 많은 세대담론은 선명성과 대중성이라는 미명하에 사회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단순화하며, 나아가 권력, 금전, 명망과 같은 사익을 위해 특정 연령층을 악마화하거나 세대 간 증오를 증폭시키는 등 여러 문제를 낳았다. 이 논문은 세대 현상을 중요한 주제로 도입하면서도 문제적 세대담론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해, 한편으론 한국사회와 정치의 세대균열에 관한 개별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입체적 인식을 구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386’과 ‘청년’을 대립시키는 대중적 세대담론의 유래와 상징구조를 추적했다.

²⁵⁾ 양의모, “다시 고개 드는 세대갈등론에 관하여.” 『한겨레신문』, 2019. 8. 28.

이 논문은 먼저 선행연구의 성과에 기대어 고용, 소득, 복지, 유권자 성향, 사회의식과 세대인식 등 여러 면에서 세대균열의 전체적인 배열형태를 인식해보려고 했다. 논문의 3장 1)절에서 제시한 균열의 3차원 이론 모형에 따라 정리해보면, 먼저 사회구조적 분할 양상의 차원에서 자산, 기업, 노동시장, 고용 안정성, 연금, 기타 사회보장의 여러 측면에서 각 출생 코호트의 구조적 위치는 상이하기 때문에 이 모든 부문을 관통하는 전면적인 세대간 지배관계나 불평등관계를 말할 수 없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세대균열이 계급·정치 등 다른 균열과 현실에선 중첩된다는 일반적 현상이 아니라, 세대균열 자체가 다면적이라는 점이다. 자본가는 구조적으로 노동자보다 부자지만, 50대는 모든 면에서 20대, 30대, 40대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정치적 균열의 차원에서 '86세대'라고 불리는 1960년대생은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 사이를 오가는 약한 진동을 하면서 제한적으로 세대적 지속성을 보여 왔는데, 이들은 일관되게 노년층보다는 1970~80년대생에 더 가까웠고 후자의 젊은 세대는 '86세대'의 진보적 정치엘리트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어서 '86세대 대 청년세대'라는 담론은 한국 정치의 현실을 왜곡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의식과 정체성의 면에서 '86세대'가 경제적 불안정성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청년층보다 덜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청년층이 '86세대'와 같은 특정 연령대에 반감을 갖고 있기는커녕 본인의 부모세대에 대해 가장 큰 연민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0대 고용주를 미워하는 것과 50대를 미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런 여러 측면에서 '86세대 대 청년세대'라는 갈등구조, 불평등구조, 지배구조가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주장은 사회의 특정 부분 영역에서는 타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한 제한적 진리주장을 뛰어넘어 거대담론으로 스스로를 주장했을 때는 부정직한 과장이나 허구적 서사에 지

나지 않게 된다. 오늘날 많은 세대담론이 말하는 것처럼 ‘86세대’, ‘50대’, ‘60년대생’이 산업화·민주화의 결실을 독식하고 후세대가 올라올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기득권자라는 담론은, 한국사회 정치경제와 노동시장의 중심부 권력을 얻는 데 성공한 엘리트 집단에만 해당할 것이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86세대’, ‘50대’, ‘60년대생’과 같이 잘못 일반화된 세대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 ‘60년대생 남성 파워엘리트’와 같이 정확하게 세대·계급·권력·젠더 불평등이 교차하는 지점에 초점을 맞춰 개념화해야 한다. 그러한 신중함과 민감함을 갖추지 못한 세대담론은, 논리적으로 둔하면서 수사적으로만 날카로운 데마고기가 되기 쉽다.

그러한 문제에서 이 논문은 ‘386’ 담론과 ‘청년’ 담론을 중심으로 2천년대 한국의 대중적인 세대담론의 계보를 추적했다. 2019년 ‘조국 사태’ 때에 ‘386 세대’를 혐오하는 담론과 ‘청년세대’의 관점을 표방한 담론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는지는 익히 알려진 바거니와, 이 논문의 분석으로 발견한 사실은 2019년의 ‘386’ 담론의 주장과 논리들이 이미 참여정부 시기부터 보수신문의 고위 언론인들과 영향력 있는 우익인사들에 의해 거의 완제품에 가깝게 준비되어 왔다는 점이다. ‘조국 사태’는 ‘386 혐오’ 담론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 담론의 상징과 의미내용의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새로운 것은 거의 없었다. 그것의 계보는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 원형은 그때 이미 거의 완성되어 항상 새로운 인물과 사건으로 채워졌다.

그러한 ‘386 혐오’의 세대담론은 ‘청년’을 ‘386’에 의해 배제되고 착취되는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집단으로 묶어내면서, 정의·공정·민주·진보 등의 가치 언어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통해 그들의 집단정체성을 상징적으로 구성한다. “세대 전쟁론은 이기적인 기성세대가 청년의 현재를 ‘착취’하고 미래를 ‘탕진’한다고 고발한다. … 청년 세대는 나약하고 비참하고, 기성세대는 청년을 착취하고 사회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전지전능한 존

재가 되었다.”(전상진 2018: 31-32) 그래서 연령상으로 청년이지만 ‘청년 연구’를 하는 연구자이길 거부하는 김선기(2016; 2018)는 비청년층 학자, 정치인, 언론인, 대중적 지식인들이 ‘청년’ 담론의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내서 청년층에게 “타자화된 청년 정체성”을 부과해왔다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탈청년’의 문화정치 전략”을 제기했다. 그러한 탈청년’의 전략은 동시에 탈386’의 전략이기도 하다. 세대균열의 다차원성, 그리고 그것이 계급·권력·젠더 등 다른 균열과 맺고 있는 관계를 진지하게 숙고하고 개방적으로 토론하는 세대론만이 세대 현상에 대한 더 나은 인식과 대응으로 우리를 인도해갈 것이다.

(2020년 4월 12일 접수, 5월 18일 심사완료, 5월 24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푸른길.
- 강원택. 2011. “한국에서 정치 균열 구조의 역사적 기원: 립셋 - 록칸 모델의 적용.” 『한국과 국제정치』. 27(3). 99-130.
- 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 『한국정당학회보』. 12(3): 5-28.
- 강원택·성예진. 2018.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과 세대: 보수 성향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7(1). 205-239.
- 김광동·김세중·김영호·박효중·윤창현·이규식. 2010. 『노무현과 포퓰리즘시대 - 386 운동정치의 손익계산서』. 기파랑.
- 김기승·조용수. 2007. “연령대별 빈곤 진출입(entry-exit) 결정요인.” 『응용경제』. 9(3). 189-219.
- 김대호 외. 2019. 『386 OUT - 386을 죽여야 청년이 산다』. 타임라인.
- 김만흠. 1995. “정치균열,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28(2). 215-237.
- 김석호. 2018.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공정성.” 『지식의 지평』 25. 6-23.
- 김선기. 2016.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2010년 이후 청년세대담론에 관한 비관적 분석.” 『언론과 사회』. 24(1). 5-68.
- 김선기. 2018. 『청년팔이 사회』. 오월의 봄.
- 김영미. 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사회과학논집』. 47(2). 27-52.
- 김욱. 2007. “16대 대선에서 세대, 이념, 그리고 가치의 영향력.” 어수영 편. 『한국의 선거(V)』. 오름. 75-107.
- 김정훈·심나리·김향기. 2019. 『386 세대유감』. 웅진지식하우스.
- 김태승. 2011. “노무현 정부의 386정치인들의 도덕적 실패에 대한 연구: 밋세바 신드롬(Bathsheba Syndrome)과 관련하여.” 『한국정치학회보』. 45(4). 219-238.
- 남재욱. 2018. “한국 복지국가 성장의 재분배적 함의.” 『한국사회정책』, 25(4), 3-38.
- 남재욱·김영민·한기명. 2018. “고졸 청년 노동자의 노동시장 불안정 연구.” 『사회복지연구』. 49(1). 221-262.
- 노환희·송정민·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 효과: 1997년부터 2012년까지

- 의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13-140.
- 마인섭. 2003. “한국 사회균열구조의 변화와 민주주의의 정착.” 『한국정당학회보』. 2(1). 31-69.
- 문우진. 2011. “정치 의식과 불평등 투표: 17대 및 18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국가전략』. 17(3). 73-93.
- 박명호. 2009. “2008 총선에서 나타난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에 관한 분석: 386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8(1). 65-86.
- 박명호. 2012. “정치적 태도의 연속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세대와 고령화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5(4). 145-162.
- 박수명. 2013.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관하여.” 『한국정책연구』. 13(3). 113-131.
- 박원호. 2012. “세대 균열의 진화: ‘386 세대’의 소멸과 30대 유권자의 부상.” 박찬욱·김지윤·우정엽 공편. 『한국 유권자의 선택 1: 2012 총선』. 아산정책연구원. 186-217.
- 박원호. 2013. “세대론의 전환: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세대.” 박찬욱·김지윤·우정엽 공편. 『한국 유권자의 선택 2: 18대 대선』. 아산정책연구원. 200-246.
- 박재홍.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47-78.
- 박재홍. 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사회학』. 37(3). 1-23.
- 박재홍. 2010.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권력·이념·문화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75-99.
- 박해광. 2007. “문화 연구와 담론 분석.” 『문화와 사회』. 2. 83-116.
- 배진석. 2017. “투표선택과 이념성향의 세대요인: 1992-2017 대통령선거 분석.”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세미나 자료집』. 213-229.
- 백경훈 외. 2019. 『밀레니얼, 386시대를 전복하라 - 86세대의 오만과 편견에 대한 밀레니얼세대의 작심비판』. 글통.
- 신광영. 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 사회』. 81. 35-60.
- 신동균. 2013. “베이비 붐 세대의 근로생애사 연구.” 『보건사회연구』. 33(2). 5-32.
- 신진욱. 2011. “비판적 담론분석과 비판적·해방적 학문.” 『경제와 사회』. 58. 10-45.
- 신진욱. 2017. “왜 불평등의 심화는 계급균열로 이어지지 않는가?”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32, 86-123.

- 신진욱. 2020. “세대불평등 담론의 정치적 계보와 의미론: ‘386’ 담론의 구조와 변화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1990-2019.” 『경제와 사회』 126.
- 어수영. 2007. “세대와 투표양태.” 어수영 편. 『한국의 선거(V)』. 오름. 227-268.
- 오세제. 2015. “386세대 세대효과의 특징 연구: 세대효과의 조건적 표출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5(1). 133-164.
- 오유진·김교성. 2019. “성별·학력별 청년 노동시장의 이행 궤적과 유형 비교.” 『노동정책연구』. 19(3). 1-35.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 레디앙.
- 윤종인. 2018.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연령효과와 코호트효과에 대한 연구.” 『경제학연구』. 6(1). 81-114.
- 이갑윤·이현우 역음. 2014. 『한국의 정치균열 구조: 지역, 계층, 세대 및 이념』. 오름.
- 이내영. 2002. “세대와 정치이념.” 『사상』. 54. 53-79.
- 이내영·정한울. 2013. “세대균열의 구성 요소: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의정연구』. 19(3). 37-83.
- 이동관·김대호·윤창현 외. 2019. 『평등의 역습 - 좌파의 역주행, 뒤로 가는 대한민국』. 기파랑.
- 이승윤. 2019. “청년 불안정노동의 시대.” 『황해문화』, 여름호, pp. 20-43.
- 이승윤·백승호·김미경·김윤영. 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487-521.
- 이철승. 2019. 『불평등의 세대』. 문학과지성사.
- 이현우. 2008. “사회균열이론의 후발민주국가 적용과 한계.” 『OUGHTOPIA』. 23(2). 145-176.
- 전병유·신진욱. 2014. “저소득층일수록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 『동향과 전망』. 91. 9-51.
- 전상진. 2004.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 연구의 빈곤.” 『한국사회학』. 38(5). 31-52.
- 전상진. 2018. 『세대 게임』. 문학과지성사.
- 정보영. 2018. “청년 불안정 노동자 운동과 담론정치.”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성조. 2019. “‘청년 세대’ 담론의 비판적 재구성: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23. 12-39.

- 정진민. 2012.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세대: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1(2). 1-20.
- 정진민·황아란. 1999.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정치.” 『한국정치학회보』. 33(2). 115-134.
- 정해식·주은선. 2019. “2018년~2019년 한국의 연금개혁 논쟁과 연금정치: 계층, 세대담론의 시작과 사회적 대화.” 『비판사회정책』. 64. 241-286.
- 지은정. 2008.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연구-노후빈곤노동가설 및 숙련편향기술진보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0(3). 31-58.
- 지은정. 2009. “노후 노동지위: 생애노동경력과 재산을 매개로.” 『한국사회복지학』. 61(1). 323-357.
- 최기홍. 2016. “국민연금의 세대 간 회계와 세대 간 형평성의 측정.” 『재정학연구』. 6(3). 1-29.
- 최셋별. 2018. 『한국의 세대 연대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최요한. 2018. “청년층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이행확률의 추정.” 『노동정책연구』. 18(4). 31-50.
- 최준영·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3). 375-394.
- 한귀영. 2012. “2012년 총선은 왜 중대 선거가 되지 못했다.” 『시민과 세계』. 21. 139-155.
- 한귀영. 2013. “왜 가난한 이들은 보수정당을 지지했는가?” 이창곤·한귀영 편. 『18 그리고 19: 18대 대선으로 본 진보개혁의 성찰과 길』. 도서출판 일. 24-41.
- 황아란. 2009a. “정치세대와 이념성향: 민주화 성취세대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5(2). 123-151.
- 황아란. 2009b. “한국 정치세대의 이념적 특성과 정치행태.” 『한국과 국제정치』. 25(3). 191-217.
- Dalton, Russel J. 2008. *Citizen Politics: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Washington D.C.: CQ Press.
- Deegan-Krause, Kevin. 2007. “New Dimensions of Political Cleavage.” Russel J. Dalton and Hans-Dieter Klingemann(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538-556.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 Franklin, Mark N.. 2004. *Voter Turnout and the Dynamics of Electoral Competition in Established Democracies since 194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anklin, Mark N., Thomas T. Mackie, and Henry Valen(eds.). 1992. *Electoral Change: Responses to Evolving Social and Attitudinal Structures in Western Count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ut, Michael, Clem Brooks, and Jeff Manza. 2001. "The Persistence of Classes in Post-Industrial Societies." T. N. Clark and S. M. Lipset(eds.). *The Breakdown of Class Politics. A Debate on Post-industrial Stratification*.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55-75.
- Inglehart, Ronald.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rchheimer, Otto. 1966. "The Transformation of the Western European Party Systems." in Joseph LaPalombra and Meyron Weiner(eds.).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77-200.
- Knutsen, Oddbjørn. 2007. "The Decline of Social Class?" in Russel J. Dalton and Hans-Dieter Klingemann(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457-480.
- Lipset, Seymour Martin, and Stein Rokkan. 1967.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in Seymour Martin Lipset and Stein Rokkan(ed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Free Press. 1-64.
- Rokkan, Stein. 1999. *State Formation, Nation-Building, and Mass Politics in Europe. The Theory of Stein Rokkan*, edited by Peter Flora with Stein Kuhnle und Derek Urw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odak, Ruth. 2008. "Introduction: Discourse Studies: Important Concepts and Terms." in R. Wodak and M. Krzyzanowski (eds.). *Qualitative Discourse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29.

Realities of Generational Cleavages, Representations of
Generational Discourse
– A Qualitative Discourse Historical Analysis of the
Genealogy of Discourses on Inter-Generational Inequalities –

Jin-Wook Shin·Eunhye Cho***

As a response to the current trends that the discourses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inequality is overwhelming in the media, this paper, on the other hand, illuminates the reality of generational cleavages in South Korean social structure and politics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and, on the other hand, traced the semantic structures and the discourse historical processes of the generational discourses that have been highlighted in the major daily newspap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enerational cleavages in the 2000s do not show a consistent feature in diverse aspects including employment, income, welfare, ideology, value orientation, and voting behavior, but have a more complex structure in which the structural positions and the attitudes of different birth cohorts vary at each level. Second, the discourses of '386' generation and 'youth' generation in the mass media have spread an image of reality that distorts and oversimplifies the actual generational cleavages in South Korean society. The discourses on the 'young 386' elites, which emerged in the late 1990s, transformed into the hate discourses against the 'progressive 386' from the era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then extended into the hate

* Professor, Dept. of Social Sciences, Chung-Ang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Dept. of Social Sciences, Chung-Ang University.

discourses against the '386 generation' in the sense of an entire birth cohort.

Key words: generation, cleavage, discourse, inter-generational inequality, discourse history, discourse analysis